KNSI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1호

조선로동당 3차 당대표자회 평가: 선군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이정철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Ⅰ. 3차 당 대표자회의 세 가지 의미
Ⅱ. 당규약 개정의 의미
Ⅲ. 왜 당대표자회는 연기되었을까?
Ⅳ. 당대표자회 이후 당-국가체제

조선로동당 제 3차 당대표자회의 의제는 3가지였다. 28일 당일 선출된 16명의 집행부로 구성된 당대표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정을 결정하고 각 의제에 관해 토의와 선거를 진행하였다.

1.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
2.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하여
3.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한국의 언론들이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김정은'의 등장과 3대 세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의제에서도 보듯이 이번 당대표자회의의 주 의제는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한 것이다. 일면 당연한 과정으로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북한의 당조직이나 정치 조직이 자기 정당화 과정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정치 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매번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될 때 북한 방송이 긴급 보도 혹은 주요 보도를 통해 김정일의 추대 사실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북한 정치의 정당화 과정 즉 북한식 정치 과정의 특성 그 자체라는 논법이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는 후계 문제와 관련한 섭정이니 뭐니 하는 한국식 접근법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Ⅰ. 3차 당 대표자회의 세 가지 의미

이번 당대표자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첫째로 북한 정치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올해 들면서 북한 당국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지난 2월, 국방위원 12명의 프로필과 사진을 로동신문에 공개하는 것을 필두로 북한 당국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 시작된 소위 '유훈 체제' 식 조직 지도의 그늘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4월에 이어 두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총리 소환 및 선거 그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신임 인사라는 안건을 처리하였다. 1년에 두 번의 그것도 두 달 만에 최고인민회의를 재소집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최고인민회의 개최는 총리교체라는 급박함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총리 교체의 과정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이어 공포된 3차 당대표자회 개최 역시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어서, 북한의 정치과정이 90년대 이전의 정상적 절차를 회복하고 있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기조와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둘째로 역시 후계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시 김정은의 전격적인 등장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결정 사항들이나 선전방식은 몇 가지 중요한 분석 지점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김정은의 등장과 관련한 첫 번째 특징은 그의 등장이 선군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치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8월 24일자 로동신문 정론 <김정일 장군> 은 선군정치의 기원을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 당국은 선군체제의 기원을 1995년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박솔 초소를 방문하던 날로부터 계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북한은 선군정치의 시작을 1960년 당시 18세의 청년 김정일이 서울류경수105탱크사단을 방문하던 날로 기록하기 시작했다.[1] 이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셈이다. 정론은 이 50년을 다음과 같이 시기구분하고 있다.

>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일대 전환의 불길 속에 선군령도의 첫 10년이 흘러갔다. 백두산강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주체위업의 빛나는 계승과 조국번영의 새로운 전성기, 사회주의결사수호전을 거치며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가 지나갔고 선군의 화산분출로 강성대국에로의 대비약의

나래를 편 새 천년기의 첫 10년이 또 흘러갔다.

김정일의 선군령도는 군에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데 60년대의 10년, 그리고 군을 기반으로 '주체 위업의 계승'에 주력한 70년대 10년, '조국 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간 80년대 10년, 냉전 붕괴 이후 '사회주의 수호전'에 진력한 90년대 10년을 거쳐 2000년대는 '강성대국으로의 대비약'의 나래를 편 10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규정이다. 소위 선군정치의 공식인 셈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번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첫 기간(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동안 자신의 역할이 군 내에 당의 영도체계를 세우는 선군정치의 공식을 밟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메시지다. 동 논리에 따르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 동시에 국방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지도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2)]

김정은의 등장과 관련한 두 번째 특징은 대장 호칭 부여에 대한 문제이다.[3)] 이번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등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의 빨치산 전통에 대한 성격 규정이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대장 칭호를 받은 인물은 6인이지만 그 중 민간인은 김경희와 김정일에 이어 최용해까지이다. 이들이 군사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백두혈통과 항일 빨치산 계열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용해가 항일 빨치산 1세대이자 전 인민무력부장이었던 최현의 아들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명가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대장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체제가 은연중 분명히 해 주었다는 해석이다. 이는 곧 북한 체제의 정당성이 항일 빨치산 전통에 있음을 재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도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3차 당대표자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 것 역시 이 같은 백두혈통 정당화라는 동전의 이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김일성 유훈화에 따른 과거 백두혈통의 강조, 김정일로의 현재 권력의 집중 나아가 당중앙군사위원회나 지방당비서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후견 그룹에 의한 3중의 시스템에 의해 후견적 '제어'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김정일이 당 내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것은 74년, 대중적으로 드러난 것은 80년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현재 당대표자회의에서 나타난 김정은의 지위는 군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60년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론 <김정일 장군>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김정은이 이 3중의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 개척해야 할 길이 얼마나 먼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후견적 '제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당대표자회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동안의 선군체제가 표방해온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는 다른 어떤 체제보다도 이데올로기와 조직의 상호 관계가 중시되는 체제이다. 이들 체제에서 이데올로기는 실체적 영향력을 지니면서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이데올로기는 조직으로 전화하게 된다. 곧 이데올로기가 제도화 또는 일상화되는 것이다.

이번 당대표자회는 이 점에서 기존의 선군정치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이 주장해 온 선군정치는[4] 선군후당의 원칙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선군후당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이 빨치산 운동 즉 군대 형성을 통해 핵심을 양성하고 이들 핵심이 확장되면서 공산당이 건설되는 것이 일반론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공산당이 정치적 정당(political party)라기보다는 군당(party army)이었다는 리버털(K. lieberthal)의 주장 역시 이에 일맥상통하다.[5]

해방 공간에서 김일성 세력은 빨치산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세력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고 노동당은 이들과 함께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 등이 혼재된 연합체였다. 따라서 50년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빨치산 세력들은 군을 거점으로 해서 세력을 양성했고 이렇게 양성된 세력들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면서 당권 투쟁을 전개해갔다. 당내 논란이 본격화된 56년의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개최된 58년의 1차 당대표자회 이후 군을 거점으로 해서 성장한 빨치산 세력들이 노동당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60년 4차 당대회에서는 드디어 빨치산 이념과 세력으로 전일화된 노동당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북한 지도부가 4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1990년대 북한 노동당은 사상적 혼란, 즉 냉전 해체 이후 친중 노선을 둘러싼 갈등, 황장엽 탈북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주요 인사들의 동요, 95년도에 격화된 주체사상 논쟁 등 영도체계에서 일련의 혼란을 경험한다. 95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사상이 붉다며 '혁명적 군인정신'과 '총대'를 강조한 것은 이념적으로 혼란에 빠진 당이 아니라 사상적 보루인 군에서 체제 수호의 의지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0년의 이번 3차 당대표자회는 90년대 이래 강화된 총대 이념을 통해 곳곳에서 성장한 '핵심'들이 당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당의 군에 대한 영도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군과 군 중시풍토에서 자란 핵심 인사들이 당으로 돌아가 다시 군을 지도한다면 당의 군에 대한 지도와 통제가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론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다.[6]

이는 곧 선군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사실상의 군대가 주도하는 시기를 마감하고, 군복

벗은 당, 즉 선군체제에서 단련된 인사들이 당 조직을 장악하고 명실공히 당과 군의 일체화를 추진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된다. 이번 당대표자회가 선군체제의 제도화라는 것은 이 같은 의미에서이다. 정론 <김정일 장군>에서 선군이 "원리와 이념에서 전략과 정치방식으로" 전환했고 "승리의 열매에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뒷받침한다.

Ⅱ. 당규약 개정의 의미

당규약의 전문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에 보도된 서문 개정안에 기초해 분석해본다면 신 규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당의 강령적 목표가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최대 강령으로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빠졌고 최소강령으로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목표 규정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7]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라는 것은 북한이 중소 논쟁 과정에서 북한 나름의 과도기론으로 정립된 것이었다. 북한 내에서 이는 반제투쟁이 종국적 승리를 거두는 단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이 같은 규정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은 제국주의를 패퇴시킨다는 대자적 개념보다는 스스로 자립 자강을 이루면 된다는 즉자적 개념 하의 자기규정으로 수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이 전제되어 제국주의 존재 여부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과 무관한 것으로 될 수 있다고 독해 가능한 부분이다. 제국주의 미국과 핵무장 사회주의 조선이 공존 가능하다는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범주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소위 '적화통일' 규정으로, 남측 언론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부분이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규약의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실상 통일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쪽 정권의 수준을 인민민주주의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재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협력 가능한 남한 정권 형태를 변혁적 수준 즉 자주적 민중정권이 아니라 민족주의 자주 정권 수준으로 목표 하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 규정이 적화통일 규정이라고 본다면 이번 규약 개정으로 적화의 목표치가 물 빠진 붉은 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라는 규정에서 식민지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로 수정된 부분에서도 느껴

지는 미묘한 변화이다.

또 한 가지는 선군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헌법 개정에서는 주체사상과 동시에 선군사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번 규약 전문에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선군의 기치 밑에 ...령도' 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할 따름이다.

공산주의 역사에서 사상과 주의에 대한 규정이 갖는 엄격성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규약은 노동당이 선군개념을 주체사상과 동급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사상의 구현 방법 즉 실천(practical) 이데올로기로서 선군혁명, 선군정치, 선군기치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순수(pure) 이데올로기화된 주체사상과 동일한 반열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여전히 일면적이다. <당 규약 개정에 관한 대표자회 결정서>나 김영남위원장의 <김정일 총비서 추대사> 등에서는 주체사상과 동급으로 선군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에 들어간 표현을 규약에 규정하지 못한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974년 김일성주의라는 표현과 관련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북한이 김일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 혹은 마오주의와 동급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에서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당 스스로 동 규정을 후퇴시킨 경험이 있었다. 선군사상이라는 것을 이 같은 노동당의 고뇌라는 차원에서 해석해본다면 어떨까? 이는 노동당을 수령의 교시에 따르는 무생물이 아니라 내적 동학을 지닌 생물로 바라볼 때에만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다.

Ⅲ. 왜 당대표자회는 연기되었을까?

9월 상순, 알려지기로는 9월 7일로 예정되었던 당대표자회는 왜 연기되었을까?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수해가 그것이다. 수해 복구로 힘든 상황에서 당대표들이 지방 일을 내 팽개치고 평양으로 모이고 그 결과를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 총화하는 등의 전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 체제의 메커니

증을 경험하거나 북한에 대한 연구 수준이 높은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이 같은 의견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다. 중국 방문 직후 김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어 회의를 주재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대표자회 당시의 비디오 화면에서 나타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리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니다. 물론 9월 초에 비추어 9월 말에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논리는 가능하지만, 28일 당일 비디오 화면에 나타난 김정일 위원장의 모습에는 강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모두가 인정한다는 간단한 사실은 이 같은 논증을 약화시키는 논지이다.

셋째로는 당내에서 진행된 중요한 내부 논의가 길어졌다는 가설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내 결정 사항이 예정보다 길어져 정해진 시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후계자 문제에 관한 것인지, 북중관계에 관한 노동당 총노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노선 갈등 문제와 무관한 인사 문제에서의 권력투쟁인지 등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간 중요한 논의가 제 때에 마무리되지 못하였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셋째 해석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셋째 해석은 그 내부에 또한 큰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언론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후계 관련 권력 투쟁설 따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해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내에 파벌(faction)이 생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전제는 당내 파벌을 금지하는 '유일영도체계' 노선이 침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당대표자회가 보여준 김정일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 프로세스는 이 같은 파벌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유일영도체계 기능의 재활성화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에 주목해야 한다. 후계자를 둘러싼 '섭정' 이니 뭐니 하는 논란은 이번 당대표자회가 가져온 정치적 집중성에 비추어 재해석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9월 10일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 노동신문의 정론과 논설 사설들의 기조이다. 필자는 당대표자회를 전후한 심각한 당내논의는 북중관계를 둘러싼 문제 혹은 이와 연관된 노동당의 총노선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을까라는 가설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9월 초, 당대표자회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던 어느 날 느닷없이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이 전해졌다. 9월 11일 3월5일청년광산을 필두로 한 자강도 현지지도 소식이었다. 동 광산은 98년 당시 '강계정신'으로 상징되는 자력갱생노선의 핵심 사업

장 중의 하나이다.[8] 강계정신이란 사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강도가 스스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는 '상징 조작'이다. 98년 상황은 사실상 북중간 긴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북한이 사회주의강행군으로 돌입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북한 체제는 강계정신과 강성대국론을 내걸고 동시에 남북협력에 나서기 시작한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것과 때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올해 9월의 그 중요한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같이 미묘한 시기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3월5일청년광산을 방문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것이 필자의 고민이다. 혹시 '강계정신'으로 대변되는 당시 상황과 결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닐까? 며칠 후 발표된 9월 17일자 정론 < 곧바로 가자 >는 주목할 만한 주장을 제기한다.

> 만약 천리마가 남들이 바람타고 동쪽으로 간다고 하여 가던 길을 에돌거나 방향을 바꾸었다면 한 달음에 천리는커녕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 전 조국의 북부지구 압록강반에 펼쳐진 3월5일청년광산의 천지개벽을 두고 여기는 선군시대에 태여난 인민의 무릉도원, 공산주의선경이라고 그처럼 최상의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신 소식은 온 나라를 흥분시키고 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직 한마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울 결심을 안고 변함없이 꿋꿋이 일해 온 이곳 일군들의 위훈을 치하하시면서 답보와 침체를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참된 일군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총대동지들과 강성대국건설시대의 위훈자들이 바로 그렇게 곧바로 살아 한생을 빛내인 시대의 전형들이 아니던가.....
>
> **그이께서는 무엇으로 하여 선군승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오늘에도 고난의 그 시기에 높이 추켜드시였던 붉은 기를 더 높이 추켜드시는 것이며 자신의 강행군길에 《곧바로》, 오직 이 한구령만을 내리시는 것인가.**.....세상에는 성공과 부흥을 위한다고 하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온갖 변태적인 것과 이색적인 것들을 마구 끌어들이며 원칙이 아닌 타협과 굴종의 길, 한길이 아닌 혼돈과 변색의 두 길, 세 길을 가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비굴하게 얻은 번영, 그렇게 차례진 성공을 어찌 진정한 자기의 것,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논리를 북한 체제가 개혁 개방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으로 해석한다면 어떨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태적이고 이색적인 '시장 논리'를 끌어들여 원칙이 아닌 혼돈을 통해 번영을 얻는 것은 '곧바로 가자'는 자신들의 사상과 화해할 수 없다는 논법이다. 3월5일청년광산의 일군들은 바로 강계정신에 기반하여 '곧바로' 가는 조선노동당의 시대정신의 상징이므로, 이 미묘한 시기에 이곳을 현지 지도한 것은 북한 지도부가 경제노선에 대해 제2의 강계정신과 유사한 결심을 내렸다는 것이 아닐까? 최근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바오가 추천한 중국의 개혁 개방이라는 경험, 이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평가가 이런 식으로 결론난 것은 아닐까?[9]

핵무장으로 '선군승리의 포성' 이 울린 마당에 이젠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도 좋을 터인데 왜 김정일 위원장은 90년대식의 '붉은 구호' 인 <곧바로 가자>를 고집하는 것일까라는 이 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날 정론인 9월 18일자 정론 <주체화는 우리 경제의 부흥과 비약의 기치이다>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지금 국제시장에서는 중요한 전략물자들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오르내리고 있다. 수입원료와 연료, 수입자재와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들에서는 경제전반이 항시적인 불안정과 극심한 파동을 면치 못하고 있다.....우리에게는 세계적인 가격변동에 가슴조이면서 경제의 전도를 가늠하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오늘 인류는 심각한 자원고갈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우리는 주체화를 경제건설의 전략적 로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왔기에 오늘의 국력경쟁시대, 자원고갈시기에도 끄떡없이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다.....남에게 빌어먹는 절름발이경제를 다음세대에 넘겨주는 것처럼 큰 죄악은 없다.....외세의존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은 후대들이야 어찌되건 자기 세대만 잘 살아보자는 리기적인 관점의 발현이다. 미래를 귀중히 여기고 후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립, 자강의 길로 나가야 한다.

우리 언론들이 '빌어먹는 절름발이 경제' 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정론이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라는 북한의 오래된 노선이 바로 인민경제발전 전략이라는 빛바랜 주장은 북한 경제가 새로운 경제발전 노선을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왜 선군정치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핍경제를 유지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로동신문의 답은 '자원고갈의 시대에 대한 대비이자 후대를 위한 전략' 이라는 전통적 해법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진다. 북한이 언제 이 같은 입장에서 변한 적이 있었던가? 과연 논쟁이라도 있었던 것인가? 과문한 필자가 알 길은 없다. 다만 이런저런 추론을 해본 것일 따름이다. 당내 논쟁이 없었다면 북중정상회담 후 김정일 위원장의 숙고가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해볼 만한 추리이다. 10월 2일자 조선신보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적대국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없다. 당대표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선거에서 당건설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절대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일대 정치사변이였다.

당대표자회 직전에 이루어진 북중정상회담으로부터 북한의 경제노선변화를 추론한 우리 사회의 희망 즉 중국식 개방이나 새로운 노선 천명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어그

러졌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우리에게 말한다.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기존 로선의 고수는 정책의 경직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2년은 목전이다. 오늘의 국제 정세하에서 나라의 경제부흥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 북남관계의 개선은 서로 련계되여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과 《조선반도비핵화》, 《조국통일》은 모두 주석님의 유훈이다.

당대표자회가 기존 노선을 고수한 것이 남북관계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까? 북한경제가 중국으로 종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민족 정서에 기대어 조선신보는 아직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말 것을 유도하고 있는 듯하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이에 연동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성대국과 연결 짓고 있는 논법은 어째 익숙하다. 98년 이래 반복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되어 온 그래서 다소 지겨운 별로 새로울 것 없는 북한의 전략적 입지이다. 그러나 천안함 이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이는 기존 논리의 반복이라기보다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대를 불어넣을만한 이슈거리로 될 만한 구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Ⅳ. 당대표자회 이후 당-국가체제

어쨌든 3차 당대표자회는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령도'와 '인민군대안의 당 조직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규정'을 통해 당-국가 체제로의 정상화에 시동을 건 계기점이다. 전병호 비서의 약력을 통해 내각에 대한 당의 지도 조직인 내각 정치국이 설립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중앙군사위원회의 강화를 통해 국방위원회와 군에 대한 당중앙의 영도체계가 확립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선군노선이 제도화되면서 당과 국가 조직의 형태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당-국가 체제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선군노선에 기반한 당-국가체제라는 의미부여이다.

1차 당대표자회가 있은 후 3년 후 4차 당대회가 있었다. 여러모로 과도적인 과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번 대회 과정에 비추어보면 2012년을 전후한 시기에 7차 당대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때까지 과연 '수령'의 3대 유훈 < 강성대국 >, < 비핵화 >, < 조국통일 >의 문이 열릴 것인가? 내부정치일 수밖에 없는 당대표자회의 성패가 역설적으로 이 같은 환경변수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어쩌면 한국 '사회'가 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차 당대회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역설적으로 우리 몫일 수 있다는 얘기다.(2010/10/08)

<각주>

1) 정론에서 18세라는 나이는 1930년 김일성 주석이 카륜회의를 개최하고 조선혁명군을 창건하던 당시의 나이라는 것으로 의미부여 되고 있다.
2)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하기 대해서는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권한의 차이에 대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헌법 개정에서 북한 체제는 국방위원장에게 전반적인 국가 지도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방위원장의 권한이지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아니었다. 국방위원회는 여전히 전반적 군사관리기구에 머무르고 있음이다. 따라서 내각과 국방위원회는 여전히 경제와 군사에 대한 권한을 나누고 있고 다만 국방위원장이 이 양자를 아우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지난 수정 헌법의 요지이다.
3) 이 부분은 <민족 21> 편집팀과의 토론에서 많은 시준점을 얻었다. 전반적으로 본 글은 동 토론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다듬었음을 밝힌다.
4) 이는 김정일의 선군영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선군영도는 1960년에 시작되었지만 선군정치방식 자체는 사회주의 운동의 일반적 특징이라는 것이 북한의 공식적 주장이다.
5) Kenneth Lieberthal, 2004,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W.W. Norton & Company), ch. 2.
6) 3차 당대표자회를 2차 당대표자회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선군이데올로기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8월 종파사건이후 빨치산파가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1차 당대표자회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7) 이 같은 변화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북한식 대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규약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 한다고 하여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를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공산주의 개념의 삭제는 단순한 용어의 대체로 보기만은 어렵다.
8) 동 광산과 관련한 설명은 2008년 11월 22일자 노동신문 정론에 잘 나타난다. 2년 전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상황과 관련해서 동 광산에 대한 의미가 해설되고 있다.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 2008.11.22
9) 당시 김정일 위원장을 동행한 인물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도춘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 동지, 태종수 동지, 홍석형 동지가 동행하였다."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할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의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